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실질적인 파업으로 맞서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 공공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 한다”며 공공부문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말하는 ‘방만경영’에는 공무원연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원에 이르고, 박근혜의 남은 임기 동안 15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해 연금 개악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언론도 공무원연금 적자가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는 기초연금 예산을 웃돌게 [된다]”며 연금 개악을 주문한다.

그러나 진정한 재정 적자는 공무원연금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기업 퍼주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직후에 정부가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업에 투입한 자금만 무려 4백20조 원이 넘는다.

게다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연간 수십 조 원의 감세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가 1백만 명에 이르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위해 고작 2조 원의 재정 지출을 아까워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지난 6월 28일 ‘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노조 조합원 4천여 명이 참가했다. 2012년 총회 투쟁 이후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크게 분노했다.

이날 이총재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추진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노후를 지키려면 집회만으로 부족하다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기 위해 11월 1일 백만 총궐기 집회와,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시” 전 지부 비상총회를 개최해



“정의행위 찬반투표”와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모호한 계획이다. 파업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결의”하자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모호한 문구로 때워서 안 되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시 즉각 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파업에 돌입”하는 계획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물론 2004년 파업으로 해고된 1백30여 명의 해고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대화는커녕 탄압으로 일관해 온 것 때문에 이미 지난 4월 대의원대회 때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비롯

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제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대의원들이 그동안 결의한 파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대회는 파업을 실제로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1인당 10만 원 투쟁기금도 잘 조직될 수 있다.

투쟁 경험에 비춰보면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발표될 때 조합원들의 불만과 분노가 가장 높다. 파업 같은 집단행동은 조합원 대중의 분노와 투쟁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이므로 이때 파업 찬반투표를 해야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 속에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그래야 현장조합원들이 동참하는 힘있는 파업이 가능하다.

또, 2004년 파업 당시 그 전에 두 차례 연가 파업을 통해 투쟁 근육을 키웠듯이, 이번에도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나오기 전부터 조퇴와 연가 등을 조직해 현장조합원이 참가하는 투쟁을 확대해 가야 한다.

대의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전망을 갖고 현장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추천 소책자



※ 20원 이상 구매 시 20퍼센트 할인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박천석·장호중 지음, 노동자연대
3,000원, 64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지긋지긋한 정부의 위선과 거짓말

고령화 사회가 문제인가?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 이래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이제는 연금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고령화 사회에 맞게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적자를 줄려면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수명 연장을 축복이 아니라 '고령화'라는 재앙으로 여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여건이 나[아]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있다"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이간질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을 더 받고 있을까?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1백

95명의 평균 수급기간은 14~15년이였다. 이들 가운데 26명(13퍼센트)은 고작 10년만 연금을 받고 사망했다.

또, 모든 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2008년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는 '사망으로 인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잃은 퇴직 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정무직이 72.9세인데 반해 지방일반직은 61.1세였다. 소방공무원은 그보다 낮은 58.8세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0년 공무원연금 개약으로 신규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85만 원 (20년 이상 가입)인데 공무원연금은 2백19만 원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비난한다.

일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이다. 첫째, 두 연금은 가입 기간이 다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10.1년이었고 공무원연금은 30.23년이였다.

둘째, 납부액도 다르다. 국민연금 평균 납부액은 8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연금은 25만 원에 달한다. 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3배 더 오래 가입하고, 3배 더 많이 내고, 2.6배쯤 더 받는 연금이다. 정부는 이런 차이를 감추고 절대적 액수만 비교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난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실질적인 노후보장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공적연금을 망가뜨려 사적연금을 확대해 왔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약과 2010년 공무원연금 개약으로, 2007년 1백11조 원이던 사적연금

적립금은 2013년 3백22조 원으로 뛰었다. 이 중 개인연금이 2백37조 원이나 된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주면 노동자들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결국 정부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을 제물로 바쳐 민간보험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4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백2만 7천 원이다.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은 최저생계비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최저선이다. 왜 노동자들은 늘 '최저'에 만족해야 하나?

진보진영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정생계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올해 2인 가구 기준 적정생계비는 2백36만원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 2백19만 원은 이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형평성'을 이유로 하향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이것이 '철밥통'의 현실

정부와 언론은 민간 부문 노동자들과 비교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철밥통'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고위직과 달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특혜'라고 할 만하게 별로 없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2009~10년은 아예 동결됐다.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 거의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조건은 더욱 열악하다. 3백인 이상 민간사업장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70.6퍼센트밖에 안 된다. 또, 30세부터 60세까지 받게 될 생애임금은 9급 입직 공무원이 민간 부문보다 4억 4백78만 원 적다. 반면 5급 입직 공무원인 고위직들은 민간

부문보다 3억 원 이상 많이 받고, 연금 등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다.

진정한 특혜와 권리를 누리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매달 1천6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퇴임 후 매달 1천만 원가량 연금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1억 4천5백86만 원의 연봉에 온갖 특혜와 부수입을 얻고도 해마다 스스로 연봉을 올린다. 이런 자들이 공무원 노동자들을 철밥통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게다가 하위직 공무원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구제역 사태로 9명이 사망했고, 1백52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하고, 1명이 과로로 사망한 것도 갈수록 열악해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